

[190704 사회진보연대 이주국제팀 세미나] 유럽 정세 관련 번역

유럽 정세를 파악하는 데 참고하고자, 2018년 10월 2일에 출간된 Vol 55: Socialist Register 2019: A World Turned Upside Down?에 실린 글을 번역하였다.

* * * * *

유럽 위기와 좌파 The European Crisis and the Left

Alan Cafruny

번역: 사회진보연대 이주국제팀

불과 20년 전만 해도 '더욱 더 통합된' 유럽연합(EU)에 대한 전망은 사실상 무한해 보였다. 1997년 안정·성장협정, 1999년 경제통화동맹(EMU)의 성공적인 3단계 출범에 이어 유로화의 도입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유럽의 특색 있는 사회모델을 보존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구역을 중부와 동부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다 긴밀한 정치적 통합은 불가역적으로 뒤따를 것이 확실한 반면, 새로운 국제 준비 통화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유럽의 더 광범위한 도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EMU 채택 결정이 지정학적 및 경제적 영역(통일된 독일을 포함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에서 운영되는 많은 근접한 요인들의 결과였다면, 그것은 또한 유럽이 금융 주도 성장과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자유'에 더 민감한 앵글로-아메리칸적 맥락에서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도입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유럽화'라는 관점에서 대륙에서 정당화되었다. 2009년 국가채무 위기의 시작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다. 2011년 메르켈 총리가 공언한 대로 "유로화는 확실히 통화(currency) 그 이상의 것이다. 유로화는 단결한 유럽을 보증한다. 유로화가 실패할 경우 유럽은 실패한다." EMU의 회원국은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채무국들의 통화 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물론 동시에, 국내의 긴축이나 '내부적인 평가절하'에 유리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절하를 배제했다. 독일과 기타 핵심 국가 은행들이 대규모로 과다 노출(over-exposed)¹⁾되는 반면, 남유럽 주변부의 가계 부채는 급증하여 증가하는 독일 무역 흑자로 인한 구조적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했다. 가혹한 긴축 계획은 - 효과적으로 부채를 사회화하고 공공 기금을 은행으로 전달하는 - 징벌적 금리로 자본을 긴급 투입하는 대가로 부과되었다. 위기가

1) 익스포져(exposure)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북쪽과 동쪽으로 확산되자, EU의 위기 대응 정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중심부였던 지역을 세계 신자유주의의 진원지로 변화시켰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진 환멸과 전국적 반대가 모멘텀을 모았다. '더욱 더 통합된 연합'의 설계자들은 이제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

위기는 영구적이다

1945년 이후 유럽은 두 가지 독특한 규제적인 통합 프로젝트를 거쳐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적, 지정학적 곤경에서 비롯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온건한 형태의 경제 협력 확립을 통해 또 다른 유럽 전쟁을 막고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는 초국가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실상 유럽 민족국가들을 지지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온건한 초국가적 이니셔티브는 유기적인 미국의 패권이라는 맥락에서 제도화된 '이식된(embedded) 자유주의' 사회 및 기독교 민주적 복지의 광범위한 정착에 대응했다. 유럽연합의 반민주적 특징은 로마 조약에 내재되어 있었지만, 경제 사회 정책의 주요 지렛대가 회원국들에 남아 있을 때는 비교적 덜했다.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의 위기에서 두 번째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가 태어나, 세계의 형성 조약(1987년 단일 유럽법, 1993년 EMU, 2009년 리스본 조약)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10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지역 통화 조정 실패는 일국적 혹은 지역적 신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정당들의 단합된 가정 위에 세워졌다. 신자유주의적 '재출범'은 이러한 급진적 발전에 안정과 응집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유럽 민주적인 정책을 낳지 않고도, 국가의 특권을 크게 줄였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출과 '경쟁적 긴축'으로 상정되는 통화 동맹으로의 진입은, 실업의 증가, 금융화, 값싸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풀로서 구 소비에트 블록 경제(그리고 이후에는 중국)의 개방에 따른 노동계급 권력의 점진적 침식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미 1985년에, 유럽의 국가 자본주의 계급의 공통 이익을 대표하는 유럽 라운드 테이블(ERT)은 단일 통화를 요구했지만, 이전의 통화 연합 계획에 내재된 케인즈주의적 재정 안정제는 거부했다.

EU는 일련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즉 본질적으로는 1980년대 글로벌 부채 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남쪽 세계 대부분에 부과한 구조 조정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위기에 대응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IGs')에 대한 구제책은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의 긴축주의적 '재정협약' ('경제통화동맹의 안정, 조정 및 지배에 관한 조약')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부과한 벌금에 의해 집행된 구조적 예산 적자를 0.5%로 제한했다. 그 결과로 생긴 가혹한 긴축은 심지어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의 비판까지도 이끌어냈다. 2011년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3년 안에 - 유럽중앙은

행(ECB)은 유럽의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두 번 올렸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2012년 7월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리스에서는 아니지만 EU 차원에서는) 가장 첨예한 위기 국면이 종식되었다. 2017년 EU 회원국들은 집단적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다. 특히 EU 북부 국가들에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독일은 1980년 이후 최저 실업률(3.5%)을 기록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2009년 위기가 발생한 후 많은 회원국들이 경험한 장기 침체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고려하여 최근의 긍정적인 성장 지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회복은 얇고 고르지 못했으며, 완만한 성장으로의 복귀는 끝나가는 중으로 보이는 10년 동안의 글로벌 호황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부채 수준은 2009년 수준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규제완화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더라도, 미국의 부채 수준은 2017년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위험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2008년 이전 시기를 연상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적완화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4월 유로존의 성장은 1.2%로 둔화되었다. 이탈리아는 유로화 채택 이후 생산성 성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2%인 이탈리아의 국가 채무 위기에 대처할 수단이 없다. 이탈리아는 망하기엔 너무 크고, 살려내기에도 너무 크다.'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불평등과 빈곤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위기는 존 그탈의 말에 따르면 '사회적 유럽의 느린 죽음'을 가져왔다. 2007년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이 증가했고 복지국가의 긴축은 전반적인 안전과 사회보장의 감소를 가져왔다. 유럽위원회(EC)는 유럽인의 39%가 현재 비표준노동 및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빈곤의 위험이 현저히 더 높다고 추산한다. 55,000개의 민간 기업이 대규모 공급사슬을 통제하면서, EU 전역의 노동자의 고용, 수송, 주거를 통제한다. (2009년 이래 26%가 감소한 후) 2015년에 그리스 경제가 마침내 기초 재정 흑자(primary budget surplus)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총 성장률은 2.8%에 불과했고, 2480억 유로(국내총생산의 176%)의 부채에 계속 비틀거리고 있다. 중앙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CEE)은 '트로이카'(ECB, EC, IMF)의 가장 엄격한 구조개혁 프로그램들을 받아 온 남유럽 회원국들을 앞질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노동조합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임금도 생산성 증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동유럽의 경험을 잘 보여준다. 서방 은행들과 독일 공급사슬이 깊숙이 침투한 루마니아는 2011년 IMF와 EU로부터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노동 시장을 규제 완화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노동법은 노조 가입률과 노동자의 권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려 루마니아 사회에 '재앙'이 되고 있다.

지역 융합을 향한 추세가 반전되면서 유럽 지배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서 남북의 축을 따라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CEE와 남부 회원국을 사실상 반식민지 지위로 좌지우지하는 '다중속도(multispeed) 유럽'의 전망이 유럽위원회와 가장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시에 늘어나는 '민주적 적자'는 행정 엘리트들을 유럽 시민들로부터 분리시킨다.

이처럼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에서 우익 포퓰리즘 운동과 파시스트 성향이 뚜렷한 정당들이 강화되었고, 헝가리와 폴란드에 세력을 공고히 했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에 대한 독일 국경 개방 결정 이후 급증한 이주 문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의 분노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이들은 유럽 중심부의 대부분 국가에서 세력을 늘리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참패했다.

독일에서 사민당(SPD)은 2017년 9월 총선에서 20.5% 획득에 그친 뒤 2018년 1월 대연정으로 복귀했다. 사민당은 대연정 복귀가 더 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네오-파시스트 정당 독일은위한대안(AfD)에 2위 당 자리를 뺏기는 것을 두려워했다. AfD는 12.6%의 강제로 처음으로 분데스탁에 진입했고, 2018년 2월의 설문에서는 지지율에서 SPD를 능가했다. 2017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회당 후보 베누아 아몽이 6%의 득표에 그쳤고, 이후 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2012년 280석에서 대폭 줄어든 29석을 얻었다. 2018년 3월 이탈리아 총선은 포퓰리즘적 오성운동(M5S)과 극우적 북부연맹의 승리로 돌아가, 이탈리아 좌파와 중도좌파에게 엄청난 패배를 안겨주었다.

2011년 11월 그리스는 이른바 '유로존 재정 식민주의'의 힘을 제대로 경험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트로이카의 구제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프랑스와 독일이 재정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고,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ECB 부총재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이끄는 '테크노크라트'들의 '국민 통합 정부'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는 트로이카의 강권 아래 이뤄진 그리스 사회와 경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었다. 일련의 구제금융 협정의 결과로 2014년까지 공식 실업률은 27%까지 올라갔으며 2018년까지 20%로 계속 유지되었다. 사회서비스 및 사회공급의 대폭 삭감 속에서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어섰다. 2010년 이후 의료예산이 절반으로 삭감하고 그리스 공적자산이 몰수되고 40만 그리스인(대부분 교육을 받은 청년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었다.

시리자의 등장은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라는 주된 두 기성 경향(파소크, 신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환멸과, 그리스공산당(KKE)이 급진적 사회주의 전략에 대한 끌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황을 반영했다. 2015년 1월 전국 선거에서 시리자는 작은 민족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36.3%의 지지를 얻어 집권했다.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당 지도부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규모 대중 동원과 유럽 좌파들의 연대 호소를 통해 긴축과 부채 탕감 감소 등 유

럽연합 기관들과의 '명예로운 타협'을 꾀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가 구제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을 차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시리자의 협상력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유럽 좌파의 연대는 거의 가시적이지 않았다. 2015년 7월, 불과 수백 명이 베를린에서 그리스에 대한 긴축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개월 후 베를린에서는 15만 명이 모여 '대서양 횡단 무역과 투자 조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15년 7월 시리자가 요청한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유권자의 62%가 새롭고 더 가혹한 구제금융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와 시리자 지도부는 유로존 탈퇴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로존 탈퇴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불안정을 가져올 전략이기 때문이다. ECB의 유동성 차단 위협에 직면한 정부는 86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의 대가로 야만적인 예산 삭감, 세금 인상, 기반 시설 민영화에 굴복했다. 유로존 탈퇴를 요구했던 급진 세력을 쫓아낸 시리자는 9월 선거에서 35.5%의 득표율로 집권하여 지속적인 긴축정책을 주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트로이카의 강권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EU의 창립 회원국이자 제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에도 적용된다. 2011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브뤼셀과 금융시장의 압력에 밀려 '테크노크라트'와 마리오 몬티 전 유럽위원회 경쟁담당 위원에 의해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오성운동-북부연맹 연립정부 결성으로 새로운 금융위기가 대두되던 2018년 5월,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유럽-회의론자 파올로 사보나의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리로는 연립정부가 추천한 주세페 콘테가 아닌 전직 IMF 임원이자 긴축론자인 카를로 코타렐리를 옹호하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북부연맹과 오성운동의 지도자들이 EU와 유로화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다. 비록 콘테가 결국 수상으로 지명되었지만, 건터 외팅어 EU 예산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탈리아의 시장, 채권, 경제의 발전이 너무 기약 없어져, 유권자들에게 좌우 포퓰리스트들을 찍지 말아야겠다는 신호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국가 주권과 민주주의에 한계를 확실히 그었다.

진보적인 출구 전략이 있을까?

영구적 위기의 조건은 기존 유럽 기관의 틀 안에서 진보적 유럽 재정 및 통화 연방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가? 유로존 내에서의 광범위한 격차를 감안할 때, 최소한 세 가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첫째, 초국가적 과세로 EU 예산을 수립해야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EU 예산은 EU GDP의 1%이며, 국가 예산은 엄격한 재정 통제 대상이다. EU 예산은 1977년 맥두걸 보고서의 주장대로, 아마도 5-7% 범위 내 정도로 상당히 더 커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개혁은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현 유럽안정기구(ESM)를 유로채권 발행과 부채의 상호화(mutualization)를 허용하는 초국가적 권한 하에 있는 완전한 유럽 통화기금(EMF)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개혁은 미국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의 노선을 따른 진정한 은행 연합이다. 이러한 개혁은 법인세율 동조화(harmonization), 금융거래세, 사회헌장을 포함한 일련의 추가 조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최종 결과는 내부적 평가절하 정책과 긴축 정책과 단절하면서, 다소 좌파적 케인즈주의 노선을 따라 진보적인 재정 연방주의를 지지하는 것일 것이다. 이단적인 서클이나 케인즈주의 서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특히 유로메모란덤(유로메모 그룹의 연례 보고서)에서 주장되어 왔다.

그리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규모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유럽 기관과 독일 주도 북부 회원국들과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고려하면 그리스 위기 때 달성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진보적 연방주의에 대한 연대 혹은 유럽에서의 독일 패권주의의 본질에 대한 극적인 변혁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는 대규모로 동원되고 범유럽적인 노동운동을 수반하는 반면 후자는 계몽된 주체의식이나 다른 국가(프랑스가 가장 가능성 높은)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독일식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시나리오들 중 어느 것도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독일 복원?

유로존 개혁에 대한 현재 선도적인 접근은 프랑스-독일 리더십의 재신임을 중심으로 하는데, 프랑스가 독일의 지리-경제권력을 다소 자비로운 것으로, 그리고 양자간 공동체제적 리더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에마뉼 마크롱은 2017년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5월 국회에서 자신의 정당인 앙마르슈의 성공을 계기로 프랑스의 EU에 대한 전통적 공동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프랑스의 EU에 대한 지도력은 수년간의 느린 성장과 늘어나는 부채의 결과로 약화되어 왔다. 그가 자칭하는 '혁명'은 본질적으로 징계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다. 그가 2016년 탈퇴한 사회당을 상대로 두 차례의 결정적인 선거 승리를 거둔 마크롱은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이 시작한 전후 체제에서 먼저 일국적 출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는 1945년에서 1970년 사이 형성된 현 체제를 탈출하고 싶다." 전면적인 개혁은 독일 재무부를 달래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계좌이체 연합'에 대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민감함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크롱 정권에서는 예산적자가 2.6%로 줄어, 제럴드 다마닌 예산장관이 '적정한 적자는 바로 제로 적자'라고 주장했듯 유럽위원회의 '과잉 예산 절차'를 취소하게 되었다. 마크롱은 복지국가와 갈수록 분열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노동운동에 정면돌파를 감행했다. 2017년 11월, 그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이용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

고, 2016년의 엘컴리 노동법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반노조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 노조에 도전장을 내밀며 르몽드 지가 '1937년 설립 이래 SNCF의 가장 큰 변화'라고 표현한, 노동규칙과 연금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철도서비스 개혁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특히 전투적인 프랑스노총(CGT)에 대한 승리는 1984년 마가렛 대처가 영국 광부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고, 전후 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로의 통합을 행했던 것의 재림으로 보인다.

마크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수사적 정당성 역할을 해 온 '유럽주의' 정신의 부활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민감함을 누그러뜨리고 국민연합(구 국민전선)에 비해 자신의 국내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 그는 유럽 의회에 초국가적인 리스트를 제안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미국-프랑스 합동작전을 비롯해 2018년 4월 시리아에 대한 미국 주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프랑스군의 참여 등 보다 군국주의적이고 대서양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프랑스의 유럽 내 정치군사적 리더십을 과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철도노조와의 대립은 프랑스의 복지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힘의 대결을 나타낸다. '철도 노동자 특권'을 언급하면서 철도노조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려는 마크롱의 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이중 노동시장 추세에 힘입은 바 있는데, 현재 이미 많은 프랑스 노동자들, 특히 젊은이들은 불안정노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마크롱의 프로젝트의 운명과 관계없이, 유로존에 대해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7년 9월 총선은 몇 달간의 협상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탈퇴로 이어졌고, 이후 새 정부가 마크롱의 제안에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새로운 대연정은 상당 부분 AfD의 성과에 대한 반작용 측면에서, 크게 우경화되었다. 9월 총선은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개혁에 동참했다는, 독일 중도좌파의 약점을 드러냈다. 독일 중도좌파는 처음에는 슈뢰더 정부 하에서, 그 다음에는 메르켈의 대연정의 파트너였다. 독일은 주로 예산 규율 강화와 상대적으로 온건한 투자 펀드(마크롱의 야심찬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에 집중하고 있는 EMF에만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마크롱이 제안한 대폭 인하된 금융거래세는 디지털 세금 계획과 함께 무산되었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은 마크롱이 제안한 초국가적 리스트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운동을 유럽국민당(EPP)이 주도하도록 상당한 정치적 힘을 발휘했다. 독일은 또한 시리아에 대한 영-미-프랑스 공습에 동참하기를 눈에 띄게 거부했다. '유럽화'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본질적으로 수사적이며, 질서자유주의적 정책과 독일의 권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보장에 근거한다.

2017년 11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집돼 사회적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8년 3월에 '고용 관계의 유형과 지속 기간과 무관하게, 노동자, 그리고 비슷한 조건의 자영업자는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대담하게 선언한 사회적 공정성 패키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노동조합위원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제안들은 전적으로 국가 정부에 의

존하는 권고사항의 형태로 이행되었다. 즉 유럽위원회는 2012년 2월 '유럽식 사회 모델은 죽었다'고 인정한 마리오 Дра기 ECB 총재의 말을 사실로 확정한 셈이 되었다.

독일 헤게모니의 전환?

진보적 개혁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진보적 연방주의나 정부간 협상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애로운 독일 리더십의 가능성에서 나온다. 독일 자본의 구조적 이해가 유로존 전체의 발전적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 '계몽화된 자기 이해'로서 독일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했던 것과 유사한 헤게모니적 리더십의 형태로 유로존에서 재개할 수 있을까? 결국 유로존 개혁이 없는 것은 잠재적으로 독일에 거대한 비용이다. 독일의 엘리트들은 유로존 위기가 '보이지 않지만 만성적인 조건'이라는 것과 유로존 해체는 재앙적인 것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구조적 개혁의 실패는 독일 산업에서 저평가된 통화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미래의 위기에 유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며 유로존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 이는 마크롱을 심대하게 약화시킴으로써 프랑스 극우의 부활에 기반을 놓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수많은 지지가 있다. 브뤼셀과 베를린을 제외하고 미국 재무부와 IMF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곳에서 어떤 형태로 실제로 전략이 옹호되어왔다. 이는 독일 주도의 질서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시나리오의 기저에 깔린 가정은, 베를린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본질적으로 지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서 다소간 다루기 힘든 질서자유주의적 정통주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에 대한 독일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며 권력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의문을 가질 많은 이유들이 있다. 결국 2003년에 독일은 거리낌없이 '안정과 성장 협약'을 위반했다.

독일은 유로존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좌파케인지안적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할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구제금융과 긴축을 통한 독일의 증대하는 위기관리 전략은 그 자체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독일연방은행은 Target2 신용시스템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책임이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국가채권을 이미 대략으로 구입했으며 지금은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 자산을 구매하고 있다. 유로본드의 도입을 통한 부채상호부담은 독일의 증대하고 새로운 책임을 나타낼 것이다. 채무상환펀드 설립은 - 부채를 GDP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커다란 새로운 지출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이는 왜 독일이 은행연합의 형태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거부했는지 설명해준다. 막대한 재정 확대- 현재 독일의 균형예산법에서 금지된-은 부채를 늘리고 독일의 약화된 은행의 자본확충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유로본드에 내재된 모럴해저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용을 훨씬 늘릴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선거에서 반영된 것처럼 독일 우파의 성장은 '송금 연합(transefer union)'

(유로존 내의 부유한 국가가 다른 취약국에게 대출을 해주는 체제-역주)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훨씬 크게 만든다. GDP의 130%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실행할 이탈리아 오성운동/북부동맹 연합 정부의 형성에 반응하여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로마의 거지들(moochers)’에 대해 불평했다. 북부동맹의 리더인 마테오 살비니는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독일이나 프랑스, 스프레드(기준금리와 실제금리의 차이-역주)나 금융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덧붙여, 독일은 장기의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 저성장, 인구 감소, 공공부문과 생산성에 대한 저투자, 그리고 이민문제가 그러하다. 독일의 취약성은 아마도 핵심 자동차 산업에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트럼프가 위협하는 무역전쟁만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에서 독일의 이점을 감소시키고 중국의 이익에 도움되는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이기도 하다.

거시경제를 비롯한 여타 현실들은 독일이 진정한 헤게모니 리더십을 추구하는데 있어 거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긴축에 대한 독일의 전념- 유로존의 잠재적 불안정을 감수하고라도-은 ‘복수심의 광기’, ‘심연의 무지’나 ‘지배적인 중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 경제가 성장을 위해 ‘외국의 요구’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래로 독일 외교정책의 중심 원칙으로 작동한 수출 중상주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래, 이 모델일 지탱하기 위해 독일 자본은 가차없는 비용절감과 긴축 전략을 추구했다. 중도우파 기민련/기사련과 중도좌파 사민당에 의해 수행된 개혁프로그램과 ‘고용주의 공격’의 성공은 단위노동비용을 극적으로 감소시켰고 특히 2002년 이후 재정긴축과 하르트츠IV 노동개혁과 결합되어 더욱 그러했다. 아젠다 2010은 실업자 보호와 사회 부조를 날려버렸다.

이를 위해 독일 제조업과 상품 공급사슬의 중요한 부분이 중유럽과 동유럽으로 재배치되었고 그에 따라 독일 수출모델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가능했다. 이 공급사슬은 ‘독일 자본주의 기본구조의 놀랄만한 지속성’을 보여준다. 그 규모와 중대성은 유럽경제에 대한 독일의 통제력의 커다란 범위를 가리키며 프랑스-독일이라는 이중 리더십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유럽연합 수출의 약 25퍼센트, 유럽 GDP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급사슬(이는 국경을 넘는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생겐 협약의 지속성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을 고려한다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연결하는 중앙 허브로서의 독일의 위치에 의해 재강화된다. 1945년 이래 독일을 지배했던 ‘수출 중상주의’ 지향은 유로존 시대에 질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2017년에 독일의 무역 잉여는 2천3백4십억 유로였다(중국은 3천9백억 유로, 일본은 1천4백억 유로).

수출주도 성장과 임금 인상에 기반한 내수시장 확대의 전통적 결합은 약해졌지만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 대부분의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독일의 아웃소싱 전략은 주로 저숙련과 노동집약적 생산은 독일의 바깥에 위치하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의 강화를 가져왔다.

2015년까지 미국은 독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1960년대 이래 유지되어 왔던 프랑스의 위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적 수출 전략은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지만(30대 독일기업의 수입의 15퍼센터는 중국내 판매에서 나온다) 유럽의 주변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이는 ‘판매 시장’에서 ‘공급 지역’으로 유로존의 중대한 변화를 경향적으로 보여준다. 유로존을 독일 제조업을 위한 지역적 생산기지로서 부수적 역할로 격하시킨 것이다. 동시에 독일 자본은 발칸서부 특히 세르비아와 관계를 깊게 하고 있다. 메르켈이 2016년에 시작한 ‘베를린 프로세스’와 ‘베를린 플러스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EU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분명히 걸어진 가맹 협상을 시작했다. 6개 나라 모두가 비자없는 여행과 ‘안전·연합협정(SSA)’을 획득했다. 독일경제에 엄청나게 의존하면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그들의 포퓰리즘과 유럽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정책에 들러붙어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은 헝가리와 폴란드가 이주와 난민, 법치에 대한 유럽연합 정책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유럽연합의 압력을 감소시키려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은, 메르켈의 독일이 다자주의적 국제무역 질서의 새로운 구원자가 되고 있다는 주류미디어의 반복적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나머지 유로존 국가에 대한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순저축을 빼내는 것이다. 긴축, 느린 성장, 내부 평가절하를 부과하면서 말이다. 지난 20년간 유럽연합은 연간 1퍼센트만 성장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2001년보다 1인당 5퍼센트 적다. 유럽경제 통화동맹(EMU) 가입 첫 10년에 이탈리아는 수출 경쟁력의 20퍼센트를 잃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더 나빴다. 구원자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독일의 외국직접투자는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 중요한 자본의 원천이었다. 독일의 외국직접투자의 50퍼센트가 유로존 내에서 집행된다. 이는 특히 중부동부유럽(CEE) 국가들에 있어 그러하다. 독일 경제력의 상승과 그 결과로 생긴 이해 갈등은 유럽차원의 ‘비즈니스 엘리트’가 명백히 있지만 엄격히 말해 유럽차원의 ‘초국적 자본가 계급’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안적 전략이 없고 독일 시장과 금융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하위 자본가계급이 지역적 라이벌의 부활을 꿈꾸며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럽 좌파의 취약성의 맥락에서, 그들은 마그너스 라이너(Magnus Ryner)가 ‘질서자유주의의 철창’이라고 부른 것에 남아 있다고 비난받는다.

미 제국은 파열되었는가?

독일의 수출 중상주의 전략은 미국과 갈등을 유발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무역 정책에 대해서 그러하다. 2016년에 미국 재무부는 ‘불공정 환율 관행’ 국가에 독일을 포함시켰다. 독일이 자체 통화도 없는데 말이다. 2018년 6월에 미국은 유럽연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부과 위협을 했다. 트럼프는 심지어 독일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도 추가적 보호주의 조치를 위협했다. 그러나 이는 제국 간 경쟁과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제적 지배영역 내에 독일이 깊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힘은 전적으로 '지리경제학적'이며 독일이나 유럽연합은 나토에 대한 의존을 감축하지 않았다. 독일은 기껏해야 '하위 제국적'이며 지역적 권력은 미국 헤게모니의 자장 안에 있다.

동시에 독일이 지역적 전략을 추구할 만큼 충분히 힘이 있지만 긴축에 대해 진정으로 진보적 대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유럽의 미래에 불길한 함의를 지닌다. 미국은 유럽-특히 독일에 있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준비은행은 통화정책을 엄격하게 하기를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는 독일을 무역 공격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2017년에 미국은 미국 노동자들, 그러나 또한 유럽, 특히 독일 기업들의 희생으로 미국 기업과 주주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세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유럽은 불확실한 '미국 우선' 공격과 야심만만한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사이에 갇혀 있다. 로마조약이 1957년에 서명되었을 때, 회원국들은 세계인구의 12퍼센트를 차지했는데 그 수치는 2060년에 이르면 4퍼센트로 떨어진다. 세계 gdp에서 유럽의 비중은 2030년에 20퍼센트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 세계 5위 경제이자 유럽연합 예산의 두 번째 기여자인 영국의 탈퇴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 연안 공간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는 세계 GDP의 1/3, 세계 개인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60퍼센트는 기업내부 거래인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2017년에 미국의 외국직접투자의 64퍼센트가 유럽이었고 16퍼센트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었다. 유럽은 2016년에 미국에 투자된 3.7조 달러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미국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아시아에서보다 4배 이상 많다. 대서양 연안 경제는 무기관련 지출의 80퍼센트와 연구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

...

니코스 폴란차스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축적의 중심이 되리라는 전망에 더욱 회의적이었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직접투자, 미국시장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화폐자본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는 유럽 자본가계급의 지속적인 종속-과 과편화-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 부르주아지 (interior-bourgeoisie)'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2018년의 관점으로 보면 폴란차스가 더 정확한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두 번째, 신자유주의적 통합 프로젝트는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졌고 나토 지배영역에 긴밀하게 묶여 있다. 제도적 헌법적으로 주목할 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범유럽적 정치적 조직체 없이 국가적 권한을 심대하게 축소시켰다.

...

좌파와 유럽

...

유럽연합의 기구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독일 자본의 리더십 하에 유럽 자본가계급의 집단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조약들과 기구들의 맥락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개혁 시나리오는 독일의 ‘하위 제국적’ 전략이라는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좌파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좌파는 유로존 위기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못했다. 좌파는 긴축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작년에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운동이 불길하게 득세하는 가운데 일련의 선거 패배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긍정적 경향과 성취가 있기도 했다. 긴축은 유럽 전역에서 무수한 저항을 촉발했다. 동시에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프로그램도 일관성이 없고 비효과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캠페인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더 권위적인 형태로 강화하는 것을 제출했다. 이 정당들의 성장은 확실히 피할수 없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이 선거에서 선전한 것은 영국 청년 사이에 상당한 에너지와 헌신을 이끌어냈음을 가리킨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미국의 버니 샌더스 등도 비교된다. 프랑스에서는 장뤽 멜랑송이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20퍼센트를 얻었다.

급진 케인지언(사회주의자도 물론)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2017년 영국 노동당 선거공약은 공공투자, 소득 재분배, 국유화, 사회적 지출 확대 등 케인지언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영국을 유럽자본, 초국적 자본, 유럽연합 기구들과 갈등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러나 탈퇴 캠페인은 대안적 사회주의 혹은 좌파 케인지언 전략에 의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가 득세했다. 렉시트(Lexit) 캠페인의 힘은 매우 약했다. 브렉시트는 지배계급 가운데 반동적인 이들을 강화시켰고 이는 더욱 가혹한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토머스 파지와 윌리엄 미첼이 썼듯이 ‘유럽연합을 버리는 것은 영국 좌파에게 일생에 한번 신자유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들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험은 승리적인 좌파정당이 ‘일국 내의 사회주의’ 전략 수행에 직면하는 거대한 과제를 보여준다. 유럽 자본주의가 복잡한 지구적 생산사슬과 금융 순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히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시리자는 유럽화폐동맹 내에 잔류하면서 의회를 통한 권력의 길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다. 유로존에서의 탈퇴는 잠재적으로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해 불길한 함의가 있었는데 그리스 인민 대다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가 얼마나 급진적이든 간에 얼마나 준비를 조심해서 했든 얼마나 대중 동원이 강했던 화폐동맹 탈퇴의 경제적 결과는 파괴적이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 탈퇴 위협이 시리자의 교섭력을 증가시켰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것을 선호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사례는 유럽연합의 평등과 민주라는 외관 아래 놓여 있는 위계와 권력의 현실을 잔인하게 드러낸다. 회원국들은 주권의 중대한 면을 유럽연합에 양도하는데, 국가가 약할수록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유럽연합 조약의 의무사항들은 회원국들이 독자적 산업전략을 수행할 법적 정치적 권한을 심대하게 감소시킨다. 공공 소유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또한 국가 보조와 공공 조달은 엄격한 경쟁규칙에 종속되어 있다.

코스타스 라파비차스(Costas Lapavitsas)가 주장하듯이, “좌파의 국제주의는 유럽연합의 국제주의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향한 전략은 일국내 권력관계에 의해 부과된 제한으로부터 주의를 돌려서는 안된다. 렉시트 전략과 관련하여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하나의 회원국 내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재강화한다. 현존하는 유럽연합 기관들 내에서의 연방적 개혁 전략 역시 동일하게 말해질 수 있다. 2012-2015년 사이에 시리아의 재정장관이었던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설립한 유럽민주주의운동(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DIEM2025))은 그 강점을 말하지만 현재에 있어 연방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말한다. 2015년에 출발한 DIEM25는 ‘일국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일국의 의회, 지역의회, 자치체의회와 권력을 나누는 주권을 가진 의회를 가진 완전한 민주주의’를 설립하고자 한다. 2018년에 DIEM25는 ‘집단적 조정과 자문이사회(Coordinating Collective and Advisory Board)가 이끌고 자발적 집단(Spontaneous Collectives)의 지역 지부를 가지는 초국적 정당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했다. 이 당은 초국적 유럽 연대에 기반하여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스스로를 유럽화폐동맹이나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고 주장하는 좌파 운동에 반대한다고 하며, 앞서 말한 좌파 케인즈주의 개혁으로 구성되는 ‘유럽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현존하는 기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명확히 추구한다. 그러나 DIEM25는 현재의 사회적 세력 균형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유럽 자본과 유럽연합 기구들의 모든 부문이 제기할 수 있는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DIEM25는 사회운동의 초국적 역량과 노력을 과대평가-적어도 현재적으로-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 보텡(Marc Boteng)은 렉시트와 유럽연합 내 개혁 양자의 잠재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한편에서 양자는 자본주의에 대한 더 나은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야망의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 양자는 의회 밖의 행동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유럽연합이나 유럽화폐동맹의 멤버십이 사회주의 전략에 원천적 장애물은 아니다. 이는 1970년대 진보적 정부들이 케인즈주의 거시경제 프로그램과 산업정책으로 심대한 갈등에 처하고 결국 국제 금융시장에 굴복한 이래로 시공간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대서양의 적대라는 바다 속의 사회주의 섬은 경제적 지정학적 수준 양자에서 막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깊은 세계 금융위기 맥락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브렉시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현대 세계 경제 속의 ‘주권’은 대개 신화적인 것이

다. 이는 초국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떠한 진지한 렉시트 전략이라도 이미 진전된 사회주의 변혁 과정 내에서 제기될 필요가 있고 그것과 따로 떨어져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